

## 국가균형발전: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오수길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디지털대 정보행정학과 교수)

거버넌스는 ‘왜’, ‘어떻게’, ‘누가’ 라는 문제가 복잡한 정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새로운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 ‘왜’ 나 ‘어떻게’ 에 관한 참여정부의 노력은 인정하더라도 풍부한 정치과정을 통해 ‘누가’ 에 해당하는 지역발전의 주체를 세우는 데 있어 ‘참여’ 정부로서 가졌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았다.

### I.

‘착한 상어들의 선언’ 이 있다.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서 아기 물고기 ‘니모’ 를 찾아 나선 아버지 흰동가리돔 말린이 도중에 과랑돔 도리를 만나 가다가 상어에게 잡혔는데, 상어들이 채식을 하겠다며 선언한 것이다. 이 세미나에 모인 세 상어는 제각기 약한 물고기들과 함께 와서 자신들이 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지만 이미 한 마리는 뼈만 남았고 한 마리는 혼란스러운 틈에 도망을 갔다. ‘물고기는 친구다. 음식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지만 도리가 흘린 피에 취한 상어 브루스가 말린과 도리를 공격한다.

피억압자들의 교육론을 내세운 파울로 프레이리는 <페다고지>에서 ‘참된 교육은 A가 B를 위해, 또는 A가 B에 관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함께 행하는 것’ 을 민주주의라고 본다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가진 선의와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개발주의’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착한 상어’ 비유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희생되고 누군가는 이탈하더라도 ‘착하다’ 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 것이라면 또 다른 개발연대를 걸어온 것이라 할 것이다.

‘잘 살아 보세’ 라는 개발연대가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주었을 수도 있지만, 앞만 보고 달리는

어려운 상황에 ‘다 같이 먹고 살 수 없기에’ 희생된 물고기도 있고 킬러의 본능을 자극할 경우엔 거침없이 제거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뒤늦게 온갖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고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전 정권보다는 진전되지 않았는가’ 라는 항변이 늘 뒤따랐지만,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선정 투표나 한미 FTA 체결과정 등에서 참여정부가 보여준 ‘착한’ 선언은 그 토대가 너무나 허약한 것이라 다시 한 번 철학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 II.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행정개혁, 인사개혁, 전자정부, 재정·세제개혁, 지방분권 등 5대 분야 개혁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등 참여정부의 3대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4대 국정 원리를 구현한다는 기본 구상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이른바 삼분(三分) 정책인 분권, 분업, 분산을 핵심으로 삼았는데,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 수도권-비수도권이 각각의 기능을 분담하는 분업, 돈·기능·사람을 옮기는 분산을 말한다. 크게 보면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역혁신’ 을 지역정책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정책은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포함되는 것이다.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와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발전전략으로는 첫째, 요소투입형 성장 전략에서 창신형(創新形) 발전전략으로의 전환, 둘째, 수도권 이외에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등 전국토에서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다극분산형 균형발전 전략, 셋째, 폐쇄적 국가경영 전략에서 고도의 개방형 국가경영 전략으로의 전환 등이 제시되었다. 다핵형·창신형 균형발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5대 정책은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적 발전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생적 발전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혁신정책에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누리사업) 등이 포함된다. 낙후지역에 대한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균형정책에는 신활력사업, 농촌체험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등이 포함된다. 산업기반의 지역경제 형성을 위한 산업정책에는 16개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의 과밀해소 및 지방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정책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이 포함된다.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질적 발전정책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포함된다.

최근 정부는 ‘기업하기 좋고 살기좋은 지방’ 이라는 2단계 균형발전의 비전을 설정하고 2개 부문 14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대 부문이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과 ‘살기좋은 생활

여건 조성'이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에는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 인력난 해소, 산업용지 공급확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살기좋은 생활여건 조성에는 고품질 주택공급, 지방 초·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 지방재정 배분 시 낙후도 반영 확대 등이 포함된다.

체계적으로 제시된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목표들이 종합적인 청사진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듯하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단위의 전담기구도 설치했다. 중앙단위의 조직으로는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관련시책을 실무적으로 총괄 조정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관리, 평가하는 위원회 소속의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 있다. 그리고 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 정보 및 자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두고 있다.

지방조직으로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심의하고 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시도에 설치한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으며, 시도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지역의 경우 2006년 말 현재 전국 14개 광역지역혁신협의회가 조직되어 있고, 78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기초지역혁신협의회의 경우 132개 조직에 총 4,12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 III.

이 정도라면 완벽한 청사진을 갖췄으니(착한 상어의 선언) 혹시 (한두 마리는 희생되거나 도망간다 해도) 그 중 상당수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이며 여러 해가 지난 뒤에는 그 잠재력이 축적되어 우리 사회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보자.

우선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중복이 발생했다. 지역의 필요와 요구가 상향식으로 모여져 작성된 청사진이 아니다보니 상당부분 지역의 필요와 요구와는 별도로 거의 모든 중앙 부처들이 수립·집행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정책들이 양산되어 지역에 기반한 아이디어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증,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한 시간, 준비, 내용 등이 불충분했고, 사업 간의 조정과 시너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를 테면 '지방분권'이라는 가치를 뒷받침할 정책들을 각 부처에 경쟁적으로 주문하다보니 '복

지분권', '문화분권' 과 같은 어색하고 부적절한 정책들도 양산되었다.

각 부처 단위에서 집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정책기조가 어떻게 중복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낙후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을 보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중복되고 있어 그 성과가 어떻게 축적될 것인지 감을 잡기 어렵다. <표 1>은 낙후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을 보여주고 있다. 각 개발 사업의 유형 구분 역시 서로 나뉘질 수 있는가 하는 데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사업을 서로 다른 소관부서에서 맡고 있어 조사, 연구, 심사, 지원, 평가 등 전 과정이 비효율적이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들의 유사성을 체크한 것이다.

<표 1> 낙후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유형	주요 사업내용	소관부서	예산(2004년)
종합개발 (직접지원)	- 개축지구지원, 특정지역개발 -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 - 도서·오지·접경지역개발, 소도읍 육성 - 탄광지역개발 - 어촌종합개발	건설교통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12개사업 (8,053억원)
생활환경개발	- 주민환경개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 도서식수원개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9개사업 (5,746억원)
경제활성화	- 농공단지, 유통센터, 지역특화사업	농림부	14개사업 (1,460억원)
관광문화개발	- 녹색농촌체험마을 - 전통테마마을 - 관광지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 - 어촌체험마을 - 수목원, 휴양림	농림부 농촌진흥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42개사업 (4,584억원)
교육·복지개발	- 농어촌보건의료 - 농업인영유아양육비	보건복지부 농림부	8개사업 (732억원)
SOC생산기반 정비	- 국지도지원, 하도준설 - 경지정리, 방조제, 말기반정비 - 어장, 양식장, 어항개발, 인공어초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68개사업 (29,625억원)
합계(총 154개 사업)			5조 2백억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6: 29).

&lt;표 2&gt;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유사성

구분	소득 창출	도농 교류	관광객 유치	특정정주 기반구축	최빈특수 지역개발	정주기반 및 소득창출	소프트 사업	기반 시설	주민 유치
신활력사업	○				○		○		
접경지역 지원사업					○				
도시종합 개발사업					○				
오지종합 개발사업				○	○				
수도읍 육성사업						○			○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산촌종합개발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						○			
정주기반 확충사업				○					
진원마을 조성사업		○							○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	○	○	○						
농촌전통 테마마을사업	○	○	○						
어촌체험 관광마을사업	○	○	○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	○				○		
지역특화사업보조사업	○						○		
유사사업의 수	5	5	4	2	4	4	1	1	2

자료: 김현호·한표환(2005: 56).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은 2005년까지 147개에 이르렀다.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난개발을 초래하고 낭비요인이 있다 하여 2006년부터는 유사·중복성이 있는 56개 사업을 22개 사업으로 통합하기도 했다. 이는 투자재원의 규모나 확보 방안에서도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원섭(2005)에 따르면,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기간(2004-2008) 중 총 투자 규모는 66조5,732억 원으로 제시되었으며, 2005년도 총 투자계획 금액은 13조2,16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7조7,234억 원은 일반회계나 지방비, 민자로 조달되어

야 했는데 이 또한 불명확한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중복된 지역개발사업의 예를 보면, 600가구인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는 새농어촌건설운동(2001), 정보화시범마을(2003), 팜스테이마을(2003, 2004), 녹색농촌체험마을(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4) 등으로 약 70억 원을 지원받았다. 60가구인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는 2001-2004년에 걸쳐 약 15억 원을, 310가구인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는 2005년까지 약 88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이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과연 얼마나 ‘내생적인’ 발전의 근거를 마련했는지는 의문이다.

중앙부처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계획안을 작성한 다음, 중앙부처에서 평가결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상향식 접근이라 진전된 것일까? 지자체마다 골프장 건설을 가장 중요한 지역발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정책기획력에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상향식 접근이 이뤄졌을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지방분권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었던 일괄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자체의 개발 사업이나 오염관리를 견제 혹은 감시하는 기능까지 넘어가 무분별한 개발욕구만 자극한 것은 아닌가? 지역정책,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의 자치, 분권, 정책이어야 할 텐데 지역의 ‘토호세력’ 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산만 지원한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로운 것이 될 수 있는가? 지역의 내생적인 발전과 분권화된 자치가 중앙정부의 ‘국가균형’ 의지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형용모순인가? 지역개발과 지역혁신을 위해 선정된 사업들이 실제로는 지역개발 숙원사업이 많아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었다(조명래, 2005). 또한 부처 간 칸막이가 높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부처 간 통합적인 사업은 물론 같은 부처 내부서 간 통합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졌을까?

과연 ‘선택과 집중’ 은 지자체 스스로 선택하고 집중한 결과인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의 판단과정에서 개발연대의 중앙집권적 사업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국가균형발전’ 을 위해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정책의 내용을 선정하는 식이어서는 ‘균형’ 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추동할 장기적인 원동력은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의 역량이 결집되었다기보다는 지역의 실력자와 전문가 집단 위주로 구성됨으로써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원동력과 자원을 발견하고 발굴하는 데보다는 중앙의 지원을 받기 위한 보고서 작성과 로비에 집중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의 상황과 수출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은 반드시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정부의 호소가 진지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요소투입 위주의 사업에서 다극화되고 창신적인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개발연대에는 한강권만 발전되었지만 참여정부 들어 4대강 유역이 골고루 발전되고 있다’ 라는 정부 나름

의 평가가 있었지만, 어쩌면 개발연대 시기 한강에 퍼부었던 요소투입이 ‘신개발연대’에는 4대강 전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구하려던 ‘가치창출형’ 보다는 극복하려던 ‘지대추구형’ (rent-seeking) 지역혁신 성격이 더 컸다고 할 것이다.

#### IV.

읍면동의 기능이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변화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이 개통되면서 56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전국 지자체와 관련된 민원을 문의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통합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 축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주요 과제로는 공간의 질제고,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등이 제시되었고, 이를 위해 숲·공원 확충, 경관개선, 환경보전, 주거·교육서비스 수준 향상, 의료·건강·복지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 학교·의료공동체 등 육성, 지역고유테마 만들기, 장소마케팅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분명히 진전되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다. 이것이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방폐장 선정 과정을 두고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준수한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해왔다. 당시 한 환경단체의 월간지 표지는 당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투표함에 투표를 하는 손을 그려 놓은 것이었는데, 투표용지 대신 돈이 들어가는 그림이다. 매표 행위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와 내용적 가치를 같이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 라는 과정이 방폐장 건설의 당위성과 건설 후 지역에 돌아올 혜택을 홍보한 뒤 ‘어디에 건설할까?’ 하는 식으로 투표가 이뤄졌다는 것은 ‘방폐장을 건설하면 중앙에서 돈을 지원해줄 텐데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는 투표와 마찬가지로였다.

이처럼 합의과정이 단순했기 때문에 경주에서는 또 다시 방폐장 관리 사육과 직원 숙소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지역주민들끼리 또 다시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본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자 했다면, 과연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비효율적인 공급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대안 에너지는 어떻게 볼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까 하는 등의 여러 이슈를 오랫동안 논의하는 숙의과정(deliberation)을 거쳐야 했다.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시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차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행정에는 법적 접근방법, 관리적 접근방법, 정치적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참여정부 들어 법적 장치들이 갖춰지고 ‘국가균형’ 이나 ‘주민생활서비스’ 등은 잘 ‘관리’ 되고는 있으나 오히려 정

치적 접근방법은 약화된 느낌마저 준다. ‘정치’ (politics)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 (the political)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전 정부가 지방정부의 경제논리나 경쟁논리를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의 주체로서 NGO들에 주목하면서 지방 혹은 지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수사학 차원에서라도) 정책을 활용했다면, 참여정부 들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세력’으로 포장된 기존 개발세력들이 지역발전의 거버넌스를 장악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한 가지 빠뜨린 것’은 바로 다양하게 열린 거버넌스를 진정한 민주적 거버넌스로 만들어낼 철학이 부족했던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열린 공간의 성격과 내용과 가치를 규정할 철학이다. 그것은 ‘발전’의 방향을 이전과는 달리 ‘지속가능발전’으로 정하는 것이든 속의(심의)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로 정하는 것이든 ‘관리주의’ 수준은 넘어서는 것이었어야 했다. 거버넌스는 ‘왜’, ‘어떻게’, ‘누가’라는 문제가 복잡한 정치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참여정부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 ‘왜’나 ‘어떻게’라는 데는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풍부한 정치과정을 통해 ‘누가’에 해당하는 지역발전의 주체를 세우는 데는 ‘참여’ 정부로서 실망스러웠다 할 것이다.

가령 784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14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학계가 30%로 가장 많고 NGO는 7%에 불과하다. 산업계 14.9%, 연구원 7%, 공무원 6%, 광역의원 5.9%, 유관기관 5.5%, 언론계 6% 등 전체 구성은 ‘지역’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마치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정신계발사업, 복지환경사업 등을 ‘잘 하는 마을을 우선 지원하여 다른 마을이 따라오게 하는 사업방식’으로 진행하였던 개발연대의 새마을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균형발전정책포럼사업’으로 지원한 159개 사업 대부분을 대학교에서 주관했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발전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는 ‘정치과정’은 2000년대 중반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간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발전시켜왔던 지방의제21 사업주체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모범사례를 만들어왔던 주민자치센터 주체들이 ‘누가’의 역할을 담당해왔고 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시책에 적합한 다른 주체들을 애써 따로 찾아다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또한 ‘시민사회가 융통성이 없었다’라는 항변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민주적 의사결정과 행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법, 즉 적극적인 경청, 창조적인 갈등, 중재, 협상, 정치적 상상력, 공적인 대화, 공적인 판단, 찬양과 감사, 평가와 반성, 지도 등 민주주의의 예술을 참여정부는 보일 수 있어야 했다고 본다.(2007/05/21)

